



## 해양수산부, IMO 규제조치 설명회 개최

### 해상안전 등 국제규제 대응방안 전파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 안전, 보안 및 환경 관련 규제조치에 대한 국내업계의 능동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설명회가 지난 6월30일 부산시 소재 한진해운 강당에서 해운·조선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급 소속 IMO 관련 전문가 7명이 올 상반기 중에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 법률위원회, 선박설계·설비 전문위원회 등 8개 IMO 회의 결과를 소개했다.

설명회에서는 특히 '해상인명 안전협약'의 대

폭 개정으로 선박건조 기준 및 설비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사항별 발효일자와 우리 조선업계 및 해운업계의 대처방안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또 일정기간 이상을 기본적인 정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선체강도 기준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목적기반(goal-based) 신조선 건조기준 제정 논의 상황도 상세히 설명됐다.

해양부는 설명회 중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각종 IMO회의에 의제문서 형태로 제출, 우리 업계의 입장과 이익이 국제기준 제·개정시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ILO 통합해사협약 비준대책반 구성운영

### 노사정 및 학계 관계자 14인으로 구성

해양수산부는 통합해사협약의 채택과 비준에 대비해 7월11일 노사정 및 학계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발족,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통합해사협약은 분야별로 채택되어 있는 낡고 중복된 37개의 해사관련 ILO 협약을 하나의 통합된 협약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지난 4월 개최된 ILO 해사총회준비회의의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끝으로 내년인 2006년 2월 그 채택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점검(PSC, 항만국통제)시 협약비준 여부와 무관하게 선원의 근로 및 생활 조건에 관한 사

항 점검을 할 수 있고, 선원의 안전·건강 또는 보안에 명백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출항정지도 가능해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토작업반은 그간의 쟁점사항과 애로 부분을 중점 검토하고 비준에 문제가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 해사총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동 협약의 조기 비준을 통해 우리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을 가능하게 해 우리나라 선박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할 계획이다.